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4. 10. 10

CONTENTS

< 요약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국립공원 현황
3. 국립공원 지정의 지역사회 영향
4. 부여 국립공원 대상지 검토
5. 결론 및 제언

부여군 국립공원지정 관련 사전 검토

정옥식, 사공정희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부여군 국립공원 지정 시 예상되는 득실과 함께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를 검토하였음

요 약

- 국립공원 지정의 경우 규제에 의한 주민 생활불편에 따라 민원 증가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탐방객 증가에 브랜드 이미지 상승, 예산절감, 탐방객 만족 등의 긍정적 영향이 많음
- 부여군의 경우 보전된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유적이 분포함에 따라 사적형 국립공원의 적지이며 국립공원의 전문화된 관리 및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탐방객 증가와 더불어 부여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예상됨
- 결과적으로 부여 국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초기 국립공원 개발 방향과 달리 최근의 국립공원의 경우 개발을 지양하고 자원 보전을 중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국립공원 지정 기준과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부소산, 정림사지, 능산리고분, 천마산성, 궁남지가 우선 후보지로 적격이며 광역생태네트워크 상에 있는 능산리고분과 부소산, 천마산성이 우선 편입 대상으로 가치가 높음

-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국민에 대한 자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로 지역사회 긍정적 영향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함께 동반함으로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립공원의 경우 지자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 관리의 효율성, 지자체의 예산절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반해 각종 규제에 따른 생활불편,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상권 변화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도 함께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부여군 국립공원 지정 시 예상되는 득실을 검토하고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 후보지를 선정해 보았음

□ 국립공원 지정 현황

- 국립공원 수)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현재 21개의 국립공원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산악형(17개), 해안형(3개), 사적형(1개) 등으로 구분됨
- 관련 법제) 국립공원 지정 초기에는 ‘공원법’에 근거하였으며 이후 1974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었음. 1986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가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됨

□ 국립공원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지침상에 나타난 공원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 대상지의 경우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국립공원의 경우 총 85점, 도립공원의 경우 60점, 군립공원의 경우 40점 이상의 평점을 획득할 경우 공원지정 및 편입의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정 절차) 우선 현장조사를 통한 자원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침. 이후 관할 지자체장 및 광역단체장의 의견 수렴 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됨. 이후 지정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됨

표 1. 자원성 평가의 지표 및 배점

평가요인	등 급	내 용	평점
자원성 (75)	자연 경 관 (30)	1급지 - 전국적 명성도를 갖는 명승 즉 기암, 괴석, 동굴, 계류, 폭포 노거수 등의 가시권 - 일출, 운해, 연봉 등의 원시적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조망점	30
		2급지 - 특이한 지형지물 경관요소의 가시권 - 계곡, 하천, 호수 등의 하천경관요소 가시권 - 천연림 혹은 4등급 이상의 수림대가 분포하는 양호한 산림경관 - 백사장, 갯벌, 암벽, 난대림, 방조림 등을 구비한 자연적 해안경관	25
		3급지 - 3등급 이상의 이령림 및 혼효림 분포지역. - 방조제, 연안 양식장 등을 구비한 반자연 해안경관	20
		4급지 - 3등급 미만의 동령림, 단수림 분포지역. - 농경지, 과수원, 방목장 등의 농촌경관 분포지역. - 백사장, 갯벌, 등대, 연안 양식장 등의 어촌경관 분포지역	15
		5급지 - 근경(0.5km 이하 권역)에 가옥, 창고, 축양 양식장, 수산물 가공시설, 기타 인공구조물이 존재	10
	자연 생태 계 (30)	1급지 - 천연보호구역 혹은 천연림 보호구역. -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지역 - 해양성 조류 혹은 포유류의 집단 서식지 및 산란지로 이용되는 해안 절벽 또는 암반	30
		2급지 - 임상도상 천연림 분포지역. -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이 서식하는 지역. - 어류 및 양서류 천연기념물 서식지 1km 이내 구역 - 물새류의 집단 도래지로 이용되는 수면 및 갯벌	25
		3급지 - 자연제방, 하천식생대, 자연하상이 유지되는 자연형 하천. - 호소 및 저수지 - 굴, 전복 등의 채취 및 낚시 행위가 활발한 해안 절벽 및 암초 지역	20
		4급지 - 과수원, 묘포, 뽕나무 밭 등 농경지. - 인공제방과 낙차공 등의 설치 혹은 직강공사 등의 하천정비사업 시행구역	15
		5급지 - 기타 인공생태계	10
	문화 경 관 (15)	1급지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역	15
		2급지 -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중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지역	12
		3급지 -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중 시·도 지정 문화재 보유지역	11
		4급지 -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중 기타 지정 문화재 보유지역	10
		5급지 -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중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	9
관리성 (25)	지형 보존 (15)	1급지 - 경사도 30도 이상의 급경사 및 해안 단애 지역. - 자동차도로, 취락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산림. - 평균 해수면에서 50m 미만의 지역	15
		2급지 - 도로, 취락에서 100m 이내의 산림. - 평균해수면에서 50m 이상 100m 미만 거리의 지역	12
		3급지 - 과수원, 농경지, 저수지 등의 영농 관련 토지. - 평균해수면에서 100m 이상 200m 미만 거리의 지역. - 수심 20m 미만의 간석지 및 사빈해안	9
		4급지 - 나대지화된 평탄 지역. - 평균해수면에서 200m 이상 300m 미만 거리의 지역. - 수심 20m 이상의 간석지 및 사빈해안	6
		5급지 - 절토 및 성토 비탈면 혹은 채석장. - 인공구조물 밀집지역. - 평균해수면에서 300m 이상의 지역	3
	토지 소유 및 이용 (10)	1급지 - 취락 및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를 제외한 국유지	10
		2급지 - 취락 및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를 제외한 공유지	8
		3급지 - 사찰 등 종교시설의 담장과 울타리 등 경계시설내의 토지	6
		4급지 - 5세대 미만의 취락 및 사유지	4
		5급지 - 5세대 이상의 취락 및 집단시설지구내 토지	2

출처 : 환경부, 2008.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 시대별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 방향

- 최초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1980년대까지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는 건설부 주관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도로 신설을 비롯하여 대규모 지역 개발도 함께 이뤄짐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개발이라는 수식이 형성되었음
- 1980년대와 90년대 들어서는 보전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개발 사업의 경우도 공공시설 입지를 제외하고 진입도로개설, 주차장 확보단일 사업으로 진행됨.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내무부로 이관되기도 하였음
- 2000년대 들어서는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됨.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시도 도입되기 시작함

표 2. 시대별 국립공원 관리 방향 및 관리 주체

	국립공원 관리 기본 방향	주요 사업	국립공원 관리 주체
초기~1980	이용 중심의 지역 개발	집단시설지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	1967~1990 : 건설부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
1980~1990	보전 개념이 도입된 개발	공공시설 건설, 진입도로, 주차장 등 일부 편의시설 개보수에 국한됨	
1990~2005	보전 및 규제 중심의 관리	탐방시설 외 시설 입지는 배제	1991~1998 : 내무부 1998~현재 : 환경부
2005~현재	보전 중심의 관리, 갈등해결을 위한 시도	주민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도입, 사유지 매입	환경부

*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는 부여군과 유사한 유형의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과 최근(201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였음

1. 국립공원 지정의 긍정적 영향

□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방문객 증가

- 국립공원이 지니는 높은 인지도에 의해 2010년 기준 국립공원의 한해 탐방객 수는 42,000,000여명에 달함
-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의 경우 2010년 한해 3,000,000여명에 달함. 특히 2004년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정책에 따라 탐방객의 수는 급증하게 됨
- 부여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시 탐방객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도권에 가깝고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조건으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음

표 3. 경주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8,000	1,617,366	2,964,109	3,438,301	4,912,391	3,515,394	2,870,006	3,106,903

(* : 2004년부터 국립공원 무료 입장)

- 경주 국립공원 탐방객의 경우 5월 6월 시기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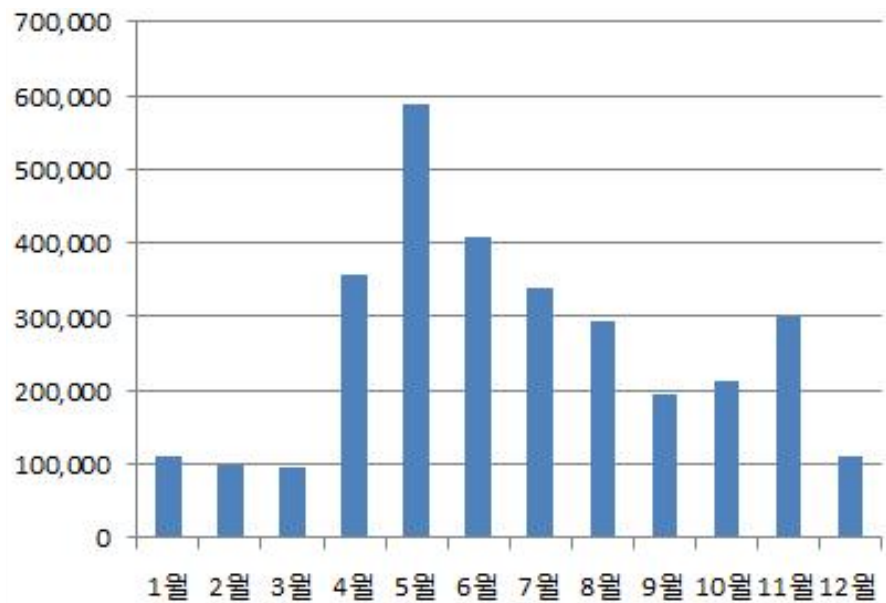


그림 1. 경주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2010년 기준)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

- 2008년 1월 이후로 경주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2013년까지 총 213억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탐방로 개보수, 기반시설 확충, 복구 및 관리 체계 정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 생태, 역사, 시설 관련 전문 인력 70여명을 확보하여 위법행위 단속, 탐방로 관리, 출입 통제, 탐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탐방객 서비스 강화 등 전문화된 공원관리를 시행중에 있음
- 문화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부여 국립공원 지정시 전문화된 인력과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부여군 문화 및 자연 자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특화된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탐방객 만족도 증가

- 경주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된 이후 실시된 공권 관리 및 탐방객에 대한 탐방프로그램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 2012년 기준 경주 국립공원의 탐방객 인지도는 79%로 크게 향상됨. 이는 과거 28%에 거치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임
- 부여 국립공원 지정 시 국립공원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한 탐방객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높은 고객 만족도의 경우 재방문율을 높임과 동시에 구매력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결과적으로 부여 관광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자체의 관리 예산 절감 및 높은 관리 효율성

- 지자체 관리 시 공무원 1인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관리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예로 경주시의 경우 1987년부터 정부 예산지원 없이 경주시 담당공무원 1인이 138.7km² 면적의 국립공원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이후 환경부 이관의 계기가 되었음
- 탐방 프로그램 운영, 청소 업무를 비롯한 시설 관리 등 제반 경비가 국비로 진행되므로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표 4. 경주 국립공원 연도별 청소작업 인원(단위 : 명)(국립공원 백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	-	-	3,001	5,298	5,973	2008년 이후 관리공단으로 관리 업무 이관

2. 국립공원 지정의 부정적 영향

□ 규제에 따른 민원 증가

- 조사결과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 인허가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에서도 인허가 부분에 가장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부여의 경우 현재의 문화재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등에 따른 규제와 더불어 국립공원지정 시 추가적인 규제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됨

표 5. 국립공원 거주민 간담회 의견(불편사항) 수렴 결과(2008, KEI)

구분		의견	
		건수	%
공원계획 분야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관련	90	14.1
	도로 및 탐방로 개설	25	3.9
	공원시설의 설치	6	0.9
	공원기본계획	1	0.2
	소계	122	19.1
인허가분야	임산물 관련	22	3.5
	건축물 관련	40	6.3
	시설물 관련	6	0.9
	가설물 관련	16	2.5
	상업시설 관련	17	2.7
	행위허가 기타	36	5.7
	소계	137	21.5
계도 및 단속분야	허용행위 완화	27	4.2
	단속관련	39	6.1
	소계	66	10.4
시설분야		103	16.1
주민지원사업		53	8.3
사유지매수		22	3.4
기타		134	21.0
합 계		637	100

□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편입된 무등산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재산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다음을 차지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 및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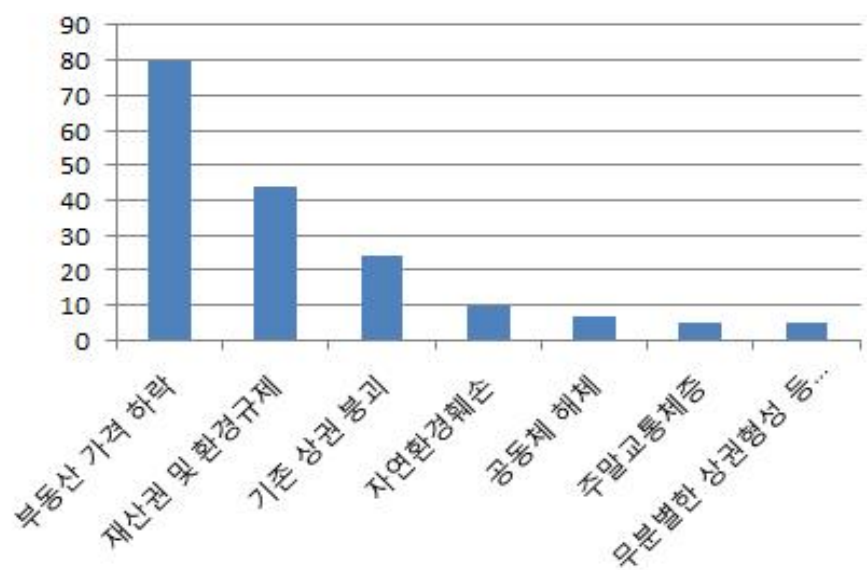


그림 2. 부동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민인견

○ 하지만 국립공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실제 부동산 지가 하락이 있었다는 응답은 22명 중 1명에 불과 했으며 90%는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국립공원의 경우 산악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민원에도 귀기우려야 할 것임

표 6. 국립공원 거주 주택 가격 변동여부(2013. KEI)

가격 변동 여부		응답자수 (N=22)	
있었다	상승했다	2	1
	하락했다		1
없었다		20	

□ 부실한 주민지원사업 및 복지 환경

- 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경우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에 반해 지원책의 경우 미비한 실정임. 국립공원 관련 예산이 운영예산과 비롯하여 시설 정비 및 설치,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지자체의 복지 정책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한 주민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책 집행 후순위로 밀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음. 실제 한 조사에서는 복지시설 부족이 생활불편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최근 들어 기반시설에 편중된 예산과 달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은 대체로 30억원 수준이며 2009년 상향되어 61억 수준이지만 이는 1개 국립공원당 2.9억에 불과한 실정임
- 지역경제활성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 인근 주민 지원에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예산 증액이 요구됨

□ 부여 국립공원 대상지 선정 시 우선 고려 사항

- 국립공원 지정 요건 충족)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지침상 지정의 요건인 자연환경 건강성, 자연 경관 미훼손 지역, 문화재 위치 등을 우선적으로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함
- 문화재보호구역) 사적형 국립공원으로써의 가치를 충족할 뿐 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계획관리 외 지역으로 보전 위주의 개발 방향과 부합되는 지역임
- 국공유지) 국립공원지정 대상지는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정함
 -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재관리에 관련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국립공원 내 거주민 혹은 사유지 소유자의 경우 문화재관리법 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추가적인 행위제한으로 이중규제 우려가 높으므로 국립공원 지정시 사유지는 우선적으로 배제하여 함

자연공원법 제14조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 또는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承)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9.18.]

[제목개정 2010.10.1.]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충남광역생태축) 충남의 경우 충남 생태계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광역생태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광역생태네트워크의 핵심축의 경우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 만 아니라 보전가치가 높을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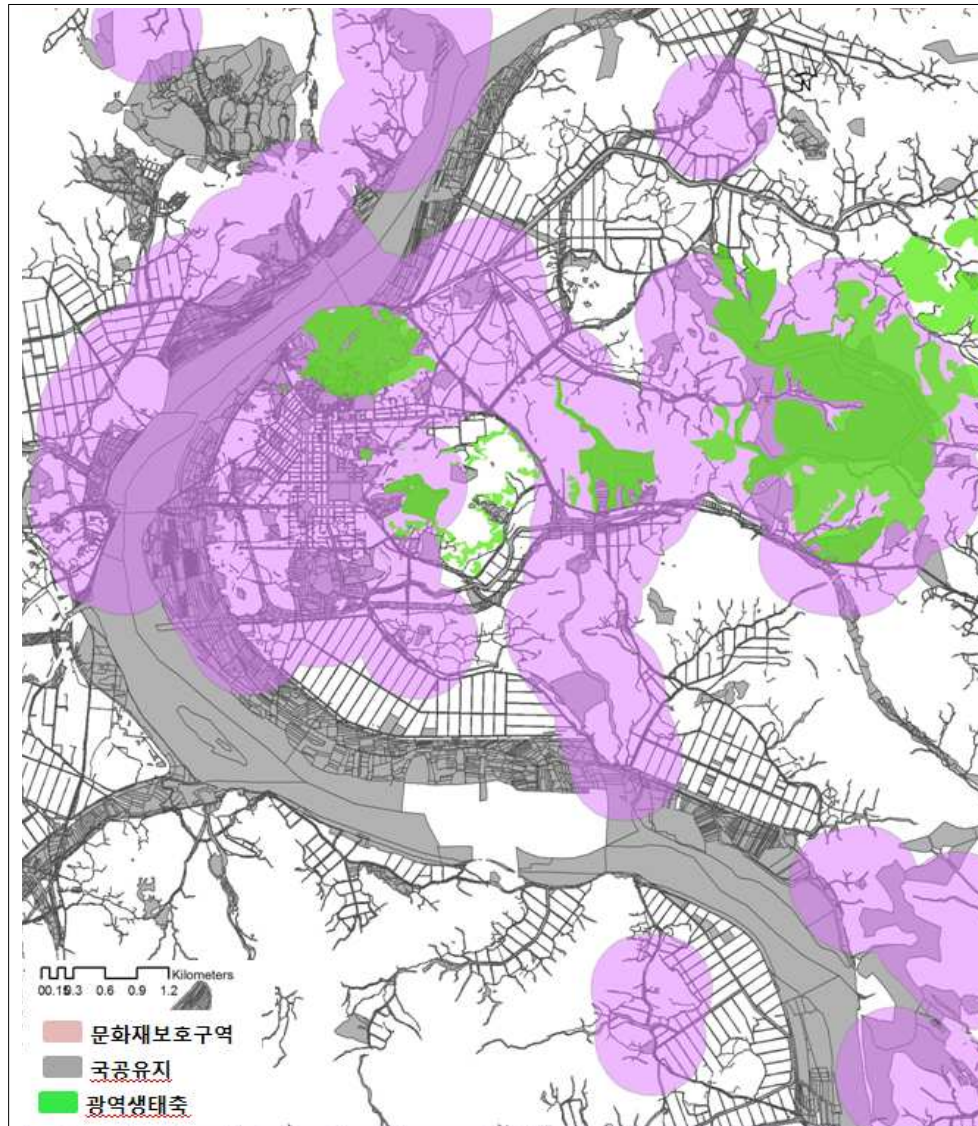


그림 3. 부여군 국립공원 후보지역 검토

□ 부여군 국립공원 대상지 검토

- 부여 소재 문화유산지역 중 자연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후보지로 부소산,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궁남지, 천마산성 우선 선정하였음

표 7. 부여 국립공원 대상지 후보지 및 검토

	국립공원 지정 기준	문화재 보호구역	국공유지	충남광역생태 네트워크	비고
부소산(성)	○	○	○	○	후보1
정림사지	○	○	○		후보2
능산리고분군	○	○	○	○	후보1
궁남지	○	○	○		후보2
천마산성	○	○	○	○	후보1

○ 대상지 모두 국립공원 지정기준과 문화재보호구역, 국공유지 지역으로 국립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부소산과 능산리 고분군, 천마산성의 경우 광역생태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유산 보전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 목적의 국립공원의 기본 취지와도 부합하는 지역이므로 우선 지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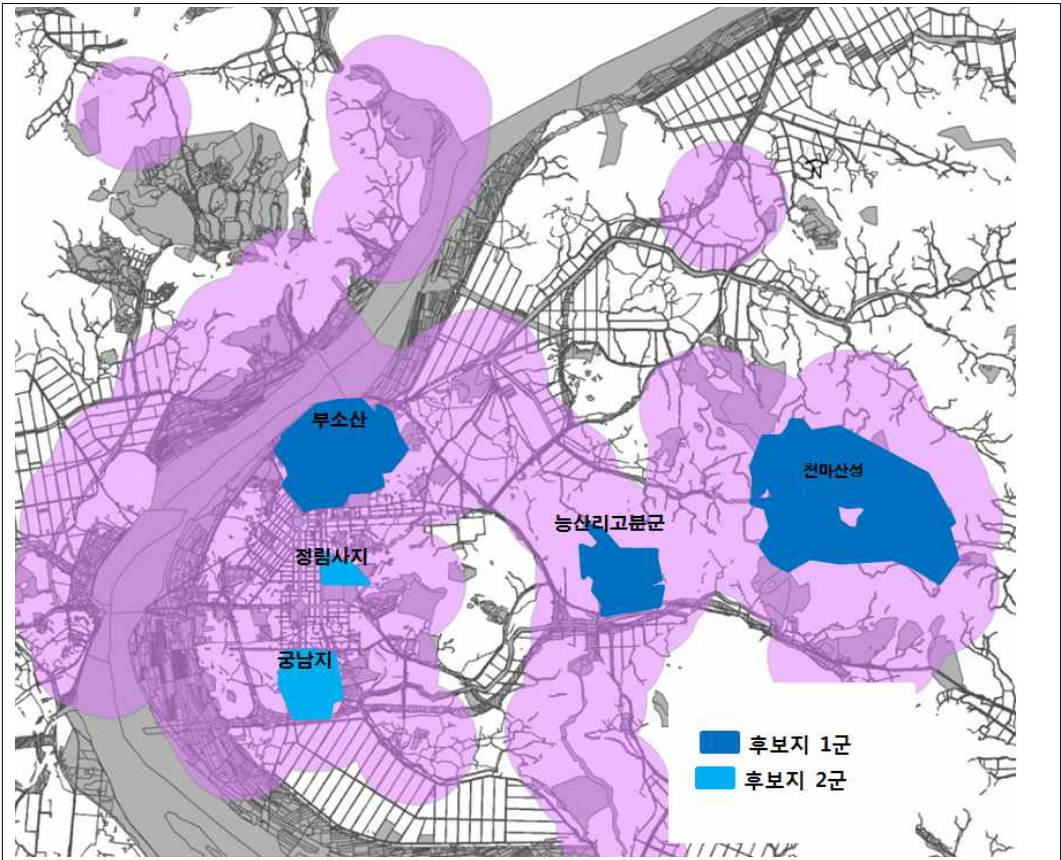


그림 4. 부여 국립공원 후보지 선정

□ 결론

- 국립공원 지정의 경우 규제에 의한 주민 생활 불편에 따라 민원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탐방객 증가에 브랜드 이미지 상승, 예산 절감, 탐방객 만족도 증가 등의 긍정적 영향도 많음
- 부여군의 경우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므로 사적형 국립공원 지정의 적지이며 국립공원의 전문화된 관리 및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탐방객의 증가와 더불어 부여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부여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립공원 지정이 곧 지역개발’이라는 이용 중심의 초기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방향과 달리 최근의 국립공원 관리는 자원 보전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집단지구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지역 자원(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제언

환경부

- 구체적인 주민 소득증진 사업 및 인근 주민지원책 필요
 - 국립공원 인근 주민의 경우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됨

● 국립공원 편입 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필요

- 부소산 및 천마산성 내부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립공원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매입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연간 예산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총 30억(2013년 기준)에 불과하므로 사유지 매입 추진 시 본 금액을 상회할 경우 추가 예산확보를 요구해야 할 것임

● 사적형 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탐방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필요

- 산지형 국립공원의 대표 격인 설악산의 경우 가을 단풍철에 많은 인원이 찾는 반면 사적형 국립공원인 경주의 경우 5월과 6월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산지와 구별되는 시설 및 탐방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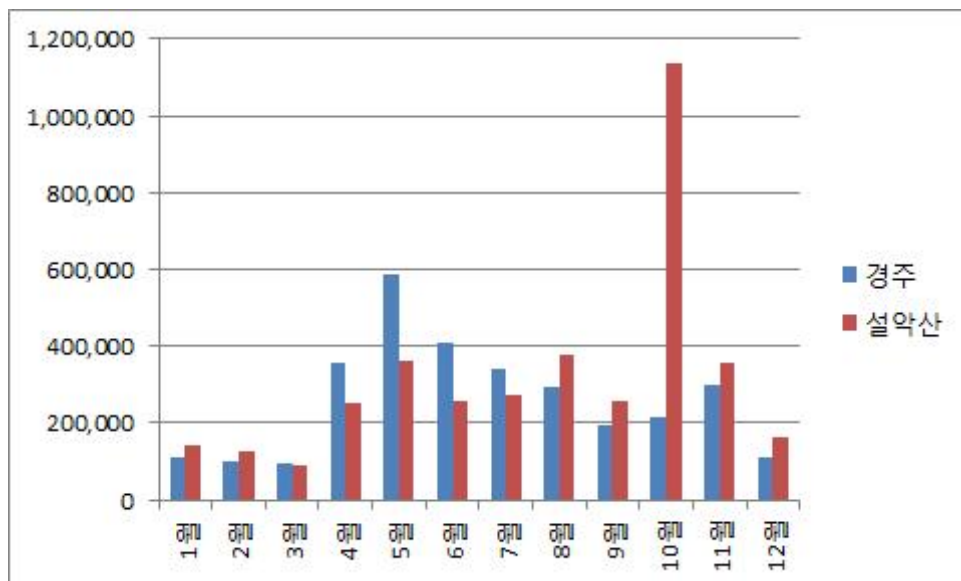


그림 5. 경주 국립공원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수(2013)

[문화재청]

●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리 효율화 필요

- 지방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대부분(88%)은 지자체에 관리가 위임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인원증원 및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재관리 예산 증액과 더불어 국립공원 지정 시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의 활용, 사회적기업 운영, 주민 관리단 운영 등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함

표 8 .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관리 인력 연도별 추이(2012. 문화재청)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 인력	841	869	869	862	867
지정문화재 수	9,953	10,201	10,677	10,928	10,893
1인당 관리 문화재 수	11.8	11.7	12.3	12.7	12.5

[부여군]

● 국립공원 인근 주민 복지 정책

- 국립공원 인근 주민이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 국립공원관리공단. 2014. 국립공원, 바로알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컷뉴스. 2007.04.30.
동아일보. 1998.09.15.
문화일보. 2007.05.01.
문화재청. 2013. 2013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박용하, 전성우, 엄정희, 홍현정, 최현아, 변병설. 2012.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
용 및 관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동하, 여운상. 2014.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환경부. 2008.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환경부